

“세계 인재가 찾아오는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

김대중 교육감 신년기자회견…주요 정책 방향 제시

“행정통합 단체장 뽑을 때 ‘통합교육감’ 선출에 찬성”

전남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미래교육과 지역 공생교육, 국제교류 확대를 축으로 한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에 나선다.

김대중 교육감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미래교육과 지역 공생,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벌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하겠다”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며 “2025년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제 교육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전남이 첨단 AI·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흐름에 발맞춰, 교육을

지역 산업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교육 실천 공간인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 연계 AI 리터러시 교육과 IB교육, 글로벌 독서인문 교육을 통해 질문·토론 중심 수업을 확산한다.

또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 개별 학습 이력을 분석하고, 기초학력향상학교 운영과 1대1 튜터링을 통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을 교육 자산으로 활용해 ‘전남 의(義) 교육’을 확산하고, (가칭) ‘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제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교육 완성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6 전남교육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도 강조했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 국제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확대하고,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 작은 박물관’과 글로벌 K-에듀센터 등을 통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안

착하기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책 수립부터 예산, 인사,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투명성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소망,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책

에 맞고 전남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그동안 광주교육과 공동학군제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며 “광주시교육청에도 통합을 준비하는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로 상당한 지역별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통합은 행정통합보다도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열려낸 출판 기념회 준비를 중단했으며 출마 선언도 당분간 유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무안공항 조류충돌 잦은 오전 최소인력 운영” 허점 지적

김문수 “55%가 오전 9시 이전…사고 당시 관리 1명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6일 12·29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으며 무안공항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황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가운데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엔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

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새들은 야간 또는 새벽에 이동한 뒤 일출 전후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공역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류 생태 및 항공 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교육통합’ 논의

오늘 회동…이달 중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도 의견 교환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사진)이 ‘광주·전남 교육통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앞서 이 교육감은 6일 강 시장 측에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한 시·도교육청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공식 만남을 요청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만 논의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정책적 준비에 나서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 교육감과 강 시장은 7일 오후 시청에서 만나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은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보조를 맞춰 함께 추진돼야 한



다”며 “광주시와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 역시 이뤄야 할 과제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달 셋째 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도 만나 교육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앞서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광주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접수

생후 12개월부터 월 20만원

전남도는 2024년생에 이어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본 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뒀다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진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양부남, 행정정보시스템 재난대응력 강화 추진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 을·사진)은 6일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행정서비스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별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체계 구축 등 관련 핵심 사

안·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체계 구축 등 관련 핵심 사

안·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공포·시행

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구성방식은 판사회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기시했다. 부처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지정되는 내란·외환·반란 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연합뉴스

시장·지사 출마자 특별법 발효 10일 내 사퇴

▶1면서 계속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단체를 먼저 통합하고, 기초단체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선 광역, 후 기초 통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 초안에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 아래 서울특별시에서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도(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자치단체는 조직·인사·재정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실현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통합 출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보조기관

직급 상향, 행정기구 설치 특례, 사무 권한 배분 등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며, 청사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거 제도에 특별이 적용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

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다. 통합 광역의회 역시 같은 선거에서 선출하며,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공직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광주시·전남도 의회 의원이나 현직 광역단체장이 통합 자치단체장 또는 통합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임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 시장은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 자치단체 출범 이후에도 종전 시·도의 법령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조례와 규칙은 종전 해당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시·도 소속 공무원의 신분 역시 통합 자치단체 소속으로 승계된다.

최종 법안에는 통합 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방식과 정부 인센티브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